

‘꼬일대로 꼬인’ 조선대, 파행 장기화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구성원들 간의 사분오열로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총장 선출을 위한 세부로드맵이 나온 가운데 집권 총장의 출근 투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최다 투표권을 쥐고 있는 교수평의회, 대자협 의장을 맡고 있는 직원노조 모두 크고 작은 내분으로 몸살이다.

이 와중에 차기 총장에 뜻을 품은 이들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움직임이 일고 있고, 급기야 ‘피랍으로 지켜왔다’는 직선제 정신을 뒤집는 추대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학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09월 총장 선출 vs 사흘째 ‘출근 투쟁’...소송-고발戰

조선대 대자협과 혁신위원회는 법인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방안 제출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지난 24일 차기 총장 선출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고했다. 임시이사회체인 조선대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권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 4차 협의체인 대자협에 있다.

1988년 학원민주화투쟁의 성과로 1992년 7월 제18대 정병후 총장부터 2016년 9월 제16대 강동완 총장까지 직선제 총장을 선출해왔다.

대자협과 혁신위는 1차 토론회(7월9일 또는 10일)에 이어 각 단위별 내부 의견(7월10~22일), 2차 토

차기 총장 선출 로드맵 완성 vs 前총장 출근 투쟁

교수평의회도 내부 분열...교수노조 출범 신호탄

론회(7월23일 또는 24일)를 거쳐 8월2일 선출방안을 확정된 뒤 필요할 경우 8월6일 또는 7일에 추가 토론회를 열고 8월9일 최종 방안을 법인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교원소정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강 전 총장은 지난 24일부터 “업무 복귀”를 선언하며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의 총장 임명권과 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며 소정심사위 결정에 대해 급명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 총장과 총장직무대리가 함께 존재하는 ‘한 지붕 두 총장’으로 직원들의 불편과 학교구성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총장실은 폐쇄됐고, 직무대리는 교무처장실에서 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교수평의회 분열...교수노조 출범하나

학사구조 개편 등 혁신안에 반발해 대자협을 탈퇴했던 교수평의회는 최근 대의회의에서 진통 끝에 대자협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총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자협 복귀가 미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강 총

장 ‘복귀파’와 ‘퇴진파’가 양존해 의견 조율 역시 속제다.

“총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교평 지도부에서 강 전 총장 복귀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평 내부에서는 집단 이탈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수노조 설립에 찬성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 갈라서는 시간문제”라고 귀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리고 2020년 3월까지 대학교원(수)의 노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입법부에 권고한 상태다.

대자협 4개 단위별 선거권은 2016년의 경우 교수 76%, 정규직 직원 13%, 총화 7%, 총동창회 3% 순이었다. 교평의 분열은 차기 총장 선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원노조, 위원장 선거 후유증

대자협 의장을 맡고 있는 직원노조는 지난 5월 치러진 위원장 선거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두 후보가 유효투표의 과반수(285표 중 143표 이상)를 얻지 못한 채 2표 차로 1, 2위가 갈린 가운데 무효표로 분류된 2표를 두고 이의제기가 일었고, 다득표 후보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면 과반 득표자가 돼 당선”이 확정될 수 있다”며 광주지법에 당선인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 결과는 1차적으로 직원노조, 2차적으로 대자협, 나아가 학내 운동원 진영의 해계모니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궁극적으로는 총장 선거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구성원들은 보고 있다.

총장 입지자 편가르기 조짐...역측도 무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차기 총장 입지자들의 수면아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직전 보직교수 등 4~5명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가운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勢) 규합을 위해 불필요한 여가거서 감지되고 있다. 출세기, 출대기는 물론 특정 노선 자위를 노린 ‘빅딜’도 나오고 있다.

7개월째 직무대리 체제 속에 강 전 총장이 지위를 회복하려다 잔여임기가 1년에 불과하고 총장 임명을 통한 명예회복 후 곧바로 사퇴하고 선거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입지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조인호 기자



해남군 ‘농민수당’ 첫 지급 완료

전국서 가장 먼저 도입...영암군은 조례제정 보류

영암군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해남군은 첫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해남군은 26일 육천농협에서 명현관 군수와 이순이 군의회 의장, 윤상화 농민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1만3688명의 신청인 중 1만2487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수령증 서명 후 수령하면 된다.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이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

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해남군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다.

현재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이다.

김기천 의원은 “전남도와는 달리 영암군 실정에 맞는 농민수당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올 사업추진에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조선대 전경

조선소 일감 늘었다...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현대삼호·대한조선 1000명 채용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7일 오후 2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전남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해양 목포고용노동지침 등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3개 업체와 대한조선 사내협력사 11개 업체가 참여해 취부·용접·도장·

족장·전기 등 총 100여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 모집인원과 임금 등은 행사 전 워크넷을 통해 공개한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면접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면접이 가능하다.

행사에는 면접부스 외에 2019년 조선해양산업 전망,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각종 직무 설명 등 구직자를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김정환 기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